

광주 담배꽂초 수거함 ‘쓰레기통’ 전략

담뱃갑·음료수 등 방치 ‘악취’
흡연 부추겨 지나는 시민들 고통
깨끗한 거리 조성 취지 못 살려
청소원 관리 한계... 지자체 뒷짐

광주시와 KT&G가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추진한 담배꽂초 전용 수거함이 오히려 쓰레기 투기를 유발하는 등 본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이 늘면서 수거함이 각종 생활 쓰레기로 넘쳐나고 있지만 지자체가 청소원들에게 관리 맡기고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4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광주시와 KT&G는 자치구와 협의해 동구 충장로, 서구 상무지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담배꽂초 전용 수거함 214개를 설치했다. 수거함 설치 예산은 1개당 약 30만원으로 총 6,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 지자체는 담배꽂초 수거함 관리를 해당 구역을 담당하는 청소원과 근처 상가 주인에게 맡기고 있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이다. 특히, 수거함은 유동인구가 많은 변화가를 중심으로 설치돼 취객과 흡연자들의 담배꽂초는 물론 각종 생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장소로 전략해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는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날 동구 충장로의 담배꽂초 전용수거함에는 쓰담쓰담 캠페인(쓰레기통에 담배꽂초를 버리자는 캠페인) 스티커가 붙어 있고, 바

닥엔 흡연자들이 버린 궤양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널브러져 있었다. 숙취해소제, 담뱃갑 등 생활 쓰레기들이 뒤굴고 있었고, 바닥엔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악취가 진동해 주민들이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근처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전모씨(35)는 “가뜩이나 취객이 많은 거리인데 갑자기 궤양 수거함이 생겨서 흡연구역이 돼버렸다”며 “밤낮으로 쓰레기들과 담배, 칩 냄새 때문에 고충이다. 결국 길바닥 궤양은 상인들이 치우고 있다”고 성토했다. 남구의 봉선동의 한 담배꽂초 수거함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담배꽂초를 버리는 구멍은 음료수 캔들과 안에서 내용물이 흐른 뒤 굳어 있었고,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던 흡연자들도 궤양을 집어넣으려다 바닥에 버리기도 했다. 주민 김 모씨(26)는 “정소를 언제 했는지 모를 정도로 수거함 주변은 항상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어 동네 미관을 해치고 있다”면서 “차라리 흡연자들이 자주 가는 골목에 흡연 구역을 정하고 재떨이를 갖다 놓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지자체의 관리 부실로 담배꽂초 수거함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사전에 궤양 외 각종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를 고려해 입구 쪽을 좁은 구멍으로 디자인하는 등 고민을 많이 했다”면서 “아직 전체적으로 실태 점검이 미흡한 것 같다. 시차원에서 관할 지자체들과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말했다. /글·사진=민찬기 기자

5일 오후 광주시 남구 봉선동 한 담배꽂초 전용 수거함 주변이 쓰레기, 담배꽂초 등이 무단투기된 채로 방치되고 있다.



“독단적 정책 자행, 이정선 시교육감 규탄”

광주지역 교육단체들이 5일 “공약이행이라는 명분으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정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등 교육관련 단체는 이날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협의와 논의가 완전히 배제된 채, ‘공약이니 추진하겠다’는 교육감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공약 추진은 교육주체와 체계를 무시하는 행태다”고 주장했다. 특히 “취임 직후엔 ‘방학중 학생 학교급식 제공 지침’을 각 학교에 일방적으로 하달했다”며 “이는 급식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공약만을 우선시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또 실력향상이라 포장해 365일 24시간 강제학습 요구하는 과거회귀 프로그램 ‘다양성을 품은 광주 학생 실력향상 추진 기본계획’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과거 역행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SI 교육을 반복적으로 장식처럼 비집어 넣어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경쟁 교육을 강화해 성적순으로 학생들을 서열화시키는 매우 우려스러운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중 어느 것 하나 해당 노동조합이나 주체들과 사전 협의나 논의없이 결정됐다”며 “준비과정도 검토없이 진행되는 독단적인 정책에 교육 현장은 혼란 그 자체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 광주본부가 5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으로 독단적 정책을 자행한 이정선 교육감을 규탄하고 있다. /김생훈 기자
불었다. 단체는 “이 교육감의 독단적 정책 추진이 빚어내고 있는 광주교육의 퇴행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으로 각 주체들과 충분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없이 졸속으로 ‘무조건’ 시행되는 독단이 계속되고 과거로 회귀하는 광주교육이 계속된다면 행동을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환준 기자

교육단체 ‘실력향상 계획’ 중단 촉구
“경쟁 교육 강화해 학생 서열화 우려”

환경단체, ‘한빛 4호기’ 재가동 철회 촉구

원전, 정비 마친 뒤 결정
전남과 전북 지역 환경단체는 5일 한빛원자력발전소(한빛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간 가동이 멈춘 한빛 4호기 재가동 절차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수없이 많은 부실(격납건물 공극·부식)이 확인됐음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4호기의 가동을 위해 제160차(7월 7일) 회의에서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안전 관련) 보고 안전을 처리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한빛 4호기 격납건물 상층부에서 부실 공사 징후가 발견됐는데도 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가동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빛 4호기는 2017년 5월 원자로 격납건물의 내부철판(CLP)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다수의 공극(구멍)과 부식 현상이 발견돼 5년간 가동이 멈춰 있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원안위가 검사한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일 뿐이다”면서 “재가동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며, 재가동 여부는 검사 결과를 보고 정비를 마친 뒤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영광=곽용순 기자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중

전기중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 (10년 사용), 가정용 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 주행거리 100km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 주행거리 90km

안전필수 전복방지 (틸팅)기능
최대속도 60km / 주행거리 50km



이코 ev102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캐노피 1만원)

나이스 3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 1L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
(광주터미널) 전시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NG
본사: 광주 전남 영광군 대지면 전라1로 133
(대지면) 자동차 산업단지내

상담 061) 352-3010 내선 2번
문의 061) 872-8880, 1

고흥지사 : 010-2548-7111
광주지사 : 010-3925-2181
영광지사 : 010-3925-2181

광양대리점 : 010-5355-1292
나주대리점 : 010-3626-3848
함평대리점 : 010-2602-6051

장성대리점 : 010-2819-3546
전남 동부권역 : 010-2450-1954
전남 서부권역 : 010-3647-9709

전국대리점·취급점 문의 010-2034-0141